

# 독일의 소비자 분쟁 관련 COVID-19 특별법 제정 현황 및 시사점 - 소비자와 사업자간 상생의 관점에서 -

## 목 차

1. 서론	01
2. 독일의 제1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3월 27일)	02
3. 독일의 제2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5월 15일)	09
4. 결론 및 시사점	17

정신동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jusido@gwnu.ac.kr)

## 1. 서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선언 전후로 소비자 계약 분야에 있어 대규모 계약 파기 또는 취소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 감염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기 체결되었던 계약을 취소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개 업종(여행계약, 항공운송계약, 여객, 숙박계약, 외식업분야 계약 및 음식점 이용 계약)에 있어 계약 해제 후 위약금 부담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문제되고 있음<sup>1)</sup>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임<sup>2)</sup>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소비자 간의 갈등, 즉 대규모 계약 취소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외국에서의 입법대응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독일의 소비자 문제 관련 코로나 특별법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향후, 코로나 감염병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 계약 취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2회에 걸쳐 공포된 독일의 코로나 특별법을 소개하고자 함

1)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3.15.),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5.27.), “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 공정위, 적극 행정 사례 소개”.

## 2. 독일의 제1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3월 27일)

### 가. 입법 경과

- 독일 의회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법, 도산법 및 형사절차법에 있어 COVID-19 팬데믹 피해효과 약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sup>3)</sup>)”을 공포하였음
  - 이 특별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파산위기 증가의 문제 및 회사법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다수의 계약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sup>4)</sup>
-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계약법 개정 사항은 2020년 4월 1일자로 시행되고, 2022년 9월 30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한시적 효과**를 부여하였음
  -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장기적 계약 파기가 문제되는 경우 지불유예 특별규정을 도입하고, 소비자 소비대차 계약, 즉 소비목적의 자금 대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원금 내지 이자 지급의 부담으로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음<sup>5)</sup>

3) [https://www.bmju.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rona-Pandemie.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bmju.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rona-Pandemie.pdf?__blob=publicationFile&v=1).

4) 동 법률에 대한 소개로 김진우(2020),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119면 이하 참조.

5) 개별 규정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독일 문헌으로 Schmidt-Kessel/Möllnitz, NJW 2020, 1103 ff; Wolf/Eckert/Denz/Gerking/Holze/Künken/Kurth, JA 2020 401 ff.

## 나. 지불유예(Moratorium) 특별규정

민사법, 도산법 및 형사절차법에 있어 COVID-19 팬데믹 피해효과  
약화를 위한 법률(2020년 3월 27일)

Artikel 5

민법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

§ 1

지불 유예

(1) SARS-CoV-2 바이러스 전염의 확대(COVID-19 팬데믹)에 기인하는 상황 때문에 소비자의 자신의 적절한 생활 유지 또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생활 유지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변제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2020년 3월 8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행위를 2020년 6월 30일 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변제거부권은 모든 중요한 계속적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인정된다. 중요한 계속적 계약관계라 함은 적절한 기초생활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속적 채권관계를 말한다.<sup>6)</sup>

(3) 변제의 거부가 채권자의 영업수익 기초를 위협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거부권의 행사가 채권자 입장에서 기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변제 거부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제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sup>7)</sup>

□ 제1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의 기본 규율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당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소비자에 대해 채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에 있음

- 이는 2020년 3월 8일 이전에 체결된, 즉 사실상 COVID-19 팬데믹 선언이 있기 이전에 체결된 “중대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적용되고, 최대 2020년 6월 30일 까지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행거절권 내지 지불거절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나아가, 사업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소비자인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사업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적용범위) 소비자의 대금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가능한 계약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관계가 “중대한 계속적 계약관계(Wesentliche Dauerschuldverhältnisse)” 이어야 함

- 동 법률에 의하면 “중대한 계속적 계약관계”에는 특히 “적절한 기초생활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계속적 계약관계”가 해당함(독일 민법 시행에 관한 법률 제240조 참조)

6) (1) Ein Verbraucher hat das Recht, Leistungen zur Erfüllung eines Anspruchs, der im Zusammenhang mit einem Verbrauchervertrag steht, der ein Dauerschuldverhältnis ist und vor dem 8. März 2020 geschlossen wurde, bis zum 30. Juni 2020 zu verweigern, wenn dem Verbraucher infolge von Umständen, die auf die Ausbreitung der Infektionen mit dem SARS-CoV-2-Virus(COVID-19-Pandemie) zurückzuführen sind, die Erbringung der Leistung ohne Gefährdung seines angemessenen Lebensunterhalts oder des angemessenen Lebensunterhalts seiner unterhaltsberechtigten Angehörigen nicht möglich wäre. Das Leistungsverweigerungsrecht besteht in Bezug auf alle wesentlichen Dauerschuldverhältnisse. Wesentliche Dauerschuldverhältnisse sind solche, die zur Eindeckung mit Leistungen der angemessenen Daseinsvorsorge erforderlich sind.

7) (3) Absatz 1 gilt nicht, wenn die Ausübung des Leistungsverweigerungsrechts für den Gläubiger seinerseits unzumutbar ist, da die Nichterbringung der Leistung die wirtschaftliche Grundlage seines Erwerbsbetriebs gefährden würde.

- 코로나 특별법에 대한 독일 의회 원내 교섭단체(안)<sup>8)</sup>에 따르면 소비자의 기초 생활 관련 서비스로는 특별히 의무보험, 전기, 가스, 원격통신수단이 예로서 언급 되고 있음
-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계속적 계약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적용됨

□ (소비자의 지급 거절권 요건) 소비자는 대금지급의무의 이행, 즉 변제 행위가 자신의 적절한 생활 유지에 대한 위협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법률이 팬데믹에서 기인하는 상황(Umstände, die auf die Pandemie zurückzuführen sind)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유지에 대한 위협이 COVID-19 팬데믹과의 간접적 연관성만 있으면 되고,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음<sup>9)</sup>

□ (사업자의 방어권) 소비자의 대금지급 거절이 채권자인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운영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거나 사업자의 적절한 생활 유지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급부 거절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있어, 즉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 모두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률은 채권자인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고 있음

8) BT-Drs. 19/18110, 4.

9) 이러한 지적으로 Schmidt-Kessel/Möllnitz, NJW 2020, 1103, 1105,

## 다. 소비자 소비대차 계약 분야 특별규정

### Artikel 5

#### 민법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

### § 3

#### 대부에 관한 법 규정

- (1)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소비자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COVID-19-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이러한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대주의 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또는 변제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각각의 변제기 도래 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지불유예 된다. 소비자의 변제행위는 특히 소비자의 적절한 생활유지 또는 소비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적절한 생활유지가 위협되는 경우 기대가능하지 않다. 제1문에 언급된 시간동안 본래 약정되었던 변제 기일에 맞추어 계약상 지불을 행할 권리가 여전히 있다. 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계속 변제행위를 하면 제1문에 규율되어 있는 지불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0)</sup>
- (3) 지급 연체를 이유로, 소비자의 재산상황 악화를 이유로, 또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물의 가치유지를 이유로 대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지불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배제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정될 수 없다.<sup>11)</sup>

10) (1) Für Verbraucherdarlehensverträge, die vor dem 15. März 2020 abgeschlossen wurden, gilt, dass Ansprüche des

- 소비자 소비대차 계약, 즉 소비자의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에 기해 발생하는 지불유예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 이러한 소비자 금전대여 계약에 대한 코로나 특별법 규정은 소비자의 일시적인 파산 곤경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한 금전 대여자와 차주가 합의하여 찾는다는 기본사상이 전제되어 있음
  - 이에 일부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을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지불유예) 2020년 4월 1일과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여자의 원금 반환 청구권, 이자 청구권 등은 변제기와 도래와 동시에 법률에 의하여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유예가 됨
  - 이에 대한 요건으로는 소비자가 COVID-19 팬데믹에 의한 특수 상황을 이유로 소득의 감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등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요구됨

Darlehensgebers auf Rückzahlung, Zins oder Tilgungsleistungen, die zwischen dem 1. April 2020 und dem 30. Juni 2020 fällig werden, mit Eintritt der Fälligkeit für die Dauer von drei Monaten gestundet werden, wenn der Verbraucher aufgrund der durch Ausbreitung der COVID-19-Pandemie hervorgerufenen außergewöhnlichen Verhältnisse Einnahmeausfälle hat, die dazu führen, dass ihm die Erbringung der geschuldeten Leistung nicht zumutbar ist. Nicht zumutbar ist ihm die Erbringung der Leistung insbesondere dann, wenn sein angemessener Lebensunterhalt oder der angemessene Lebensunterhalt seiner Unterhaltsberechtigten gefährdet ist. Der Verbraucher ist berechtigt, in dem in Satz 1 genannten Zeitraum seine vertraglichen Zahlungen zu den ursprünglich vereinbarten Leistungsterminen weiter zu erbringen. Soweit er die Zahlungen vertragsgemäß weiter leistet, gilt die in Satz 1 geregelte Stundung als nicht erfolgt.

- 11) (3) Kündigungen des Darlehensgebers wegen Zahlungsverzugs, wegen wesentlicher Verschlechterung der Vermögensverhältnisse des Verbrauchers oder der Werthaltigkeit einer für das Darlehen gestellten Sicherheit sind im Fall des Absatzes 1 bis zum Ablauf der Stundung ausgeschlossen. Hiervon darf nicht zu Lasten des Verbrauchers abgewichen werden.



- 소비자의 소득 감소는 사업자의 청구권 행사 및 충족이 기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히 채무자의 적절한 생계유지가 위협되는 경우가 해당함
  - 지불유예는 각각의 청구권에 대해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각각 3개월간 일괄적으로 적용됨
  - 일반적인 지불유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여러 개별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불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이러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
- (소비자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해지의 제한) 소비자를 위한 지불유예 제도와 함께 ‘지불 연체’, ‘소비자의 자산상황의 중대한 악화’ 또는 ‘대여금을 위한 담보의 가치유지’를 이유로 한 대여주의 대차계약의 해지도 배제됨
- 소비자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사업자의 해지를 제한하는 특별법 규정은 소비자를 위한 반강행규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음
  - 지불유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불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이러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

### 3. 독일의 제2차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2020년 5월 15일)

#### 가. 입법 경과

- 독일 의회는 2020년 5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입법으로 “행사 계약법, 유럽 회사법 및 유럽 협동조합법에 있어 COVID-19 팬데믹 피해효과 약화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Veranstaltungsrecht und im recht Europäischen Gesellschaft (SE) und der Europäischen Genossenschaft (SCE)<sup>12)</sup>)”을 공포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번 2차 입법은 독일 연방법무부가 초안을 작성한 뒤 연방하원(Bundestag)이 2020년 5월 14일 통과시켰고, 바로 하루 뒤인 5월 15일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이 최종 의결하였음
- 여가행사 및 여가시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의 파산 위기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신속한 입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음

12) [https://www.bmf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vid19\\_Veranstaltungsvertragsrecht.pdf;jsessionid=F2F5B54352679BFD18519662A8C6B368.2\\_cid324?\\_\\_blob=publicationFile&v=2](https://www.bmf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vid19_Veranstaltungsvertragsrecht.pdf;jsessionid=F2F5B54352679BFD18519662A8C6B368.2_cid324?__blob=publicationFile&v=2)

## 나. 여가행사 및 여가시설 이용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쿠폰발급 허용방안

행사 계약법, 유럽 회사법 및 유럽 협동조합법에 있어 COVID-19 팬데믹  
피해효과 약화를 위한 법률(2020년 5월 15일)

### § 5

#### 여가행사 및 여가시설에 대한 쿠폰

- (1) 음악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행사 또는 기타 여가행사가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개최될 수 없었거나 개최될 수 없는 경우 행사 주최자는 2020년 3월 8일 이전에 취득한 입장권 또는 기타 권한의 소지자에게 입장료 또는 기타 대금의 배상 대신에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입장권 또는 기타 권한이 여러 개의 여가행사에 대한 입장을 허용하고 이 중에 일부만 개최될 수 없었거나 개최될 수 없는 경우 행사 주최자는 소지자에게 이용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쿠폰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sup>13)</sup>
- (2) 음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또는 기타 여가시설이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폐쇄되었거나 폐쇄 중인 경우 시설 운영자는 2020년 3월 8일 이전에 취득된 이용권의 소지자에게 대금의 배상 대신에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sup>14)</sup>

13) (1) Wenn eine Musik-, Kultur-, Sport- oder sonstige Freizeitveranstaltung aufgrund der COVID-19-Pandemie nicht stattfinden konnte oder kann, ist der Veranstalter berechtigt, dem Inhaber einer vor dem 8. März 2020 erworbenen Eintrittskarte oder sonstigen Teilnahmeberechtigung anstelle einer Erstattung des Eintrittspreises oder sonstigen Entgelts einen Gutschein zu übergeben. Umfasst eine solche Eintrittskarte oder sonstige Berechtigung die Teilnahme an mehreren Freizeitveranstaltungen und konnte oder kann nur ein Teil dieser Veranstaltungen stattfinden, ist der Veranstalter berechtigt, dem Inhaber einen Gutschein in Höhe des Wertes des nicht genutzten Teils zu übergeben.

14) (2) Soweit eine Musik-, Kultur-, Sport- oder sonstige Freizeiteinrichtung aufgrund der COVID-19-Pandemie zu schließen war oder ist, ist der Betreiber berechtigt, dem Inhaber einer vor dem 8. März 2020 erworbenen Nutzungsberechtigung anstelle einer Erstattung des Entgelts einen Gutschein zu übergeben.

□ 독일 의회가 제2차 코로나계약법을 제정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가행사(음악행사, 문화행사, 스포츠 행사 등) 취소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자가 티켓 소지자에게 본래 입장권 가격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쿠폰은 추후에 개최되는 여가행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다른 여가행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여가시설(음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의 이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능해진 경우 시설 운영자가 본래 이용권 가격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

○ 마찬가지로 쿠폰은 추후 여가시설 이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

□ 본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은 2020년 3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한정되고, 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사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률상 2020년 3월 8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팬데믹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이 날부터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 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됨

○ 즉,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입장권을 계속 판매하였다면 환급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쿠폰 발급이 허용되는 또 다른 요건으로는 해당 행사가 금지 또는 접촉제한 때

문에 취소되었거나, 예술가가 격리로 인해 또는 여행금지 때문에 올 수 없었을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다. 쿠폰의 가액, 표시사항 및 환불 사항

행사 계약법, 유럽 회사법 및 유럽 협동조합법에 있어 COVID-19 팬데믹  
피해효과 약화를 위한 법률(2020년 5월 15일)

### § 5

여가행사 및 여가시설에 대한 쿠폰

- (3) 쿠폰의 가액은 모종의 사전예약 수수료를 포함한 입장료 전체 또는 기타 대금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쿠폰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비용도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sup>15)</sup>
- (4) 쿠폰에는 아래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 쿠폰이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발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쿠폰의 소지자는 제5항에 언급된 요건들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쿠폰 가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sup>16)</sup>
-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쿠폰의 소지자는 행사 주최자 또는 시설 운영자에게 쿠폰 가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적 생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지자에게 쿠폰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경우
  2. 소지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sup>17)</sup>

15) (3) Der Wert des Gutscheins muss den gesamten Eintrittspreis oder das gesamte sonstige Entgelt einschließlich etwaiger Vorverkaufsgebühren umfassen. Für die Ausstellung und Übersendung des Gutscheins dürfen keine Kosten in Rechnung gestellt werden.

□ (쿠폰의 가액) 쿠폰의 가액은 모종의 사전예약 수수료를 포함한 입장료 전체 또는 기타 대금 전체를 포함해야 함

○ 쿠폰을 발급하고 전송하는데 있어서 추가 수수료 등의 그 어떠한 비용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됨

□ (쿠폰의 표시사항) 소비자에게 쿠폰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쿠폰에 반드시 표시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 해당 쿠폰이 COVID-19 팬데믹 때문에 발급되었다는 사실, ii) 해당 쿠폰의 소지자가 특정 요건 하에 쿠폰 가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쿠폰에 표시해야 함

□ (쿠폰 가액의 환불) 소비자에게 쿠폰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환불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말까지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자를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쿠폰을 사용할 압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쿠폰 가액의 환불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평가됨

○ 나아가, 소비자가 개인적 생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쿠폰사용을 요구하는

16) (4) Aus dem Gutschein muss sich ergeben, 1. dass dieser wegen der COVID-19-Pandemie ausgestellt wurde und 2. dass der Inhaber des Gutscheins die Auszahlung des Wertes des Gutscheins unter einer der in Absatz 5 genannten Voraussetzungen verlangen kann.

17) (5) Der Inhaber eines nach den Absätzen 1 oder 2 ausgestellten Gutscheins kann von dem Veranstalter oder Betreiber die Auszahlung des Wertes des Gutscheins verlangen, wenn

1. der Verweis auf einen Gutschein für ihn angesichts seiner persönlichen Lebensumstände unzumutbar ist oder  
2. er den Gutschein bis zum 31. Dezember 2021 nicht eingelöst hat. “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쿠폰 가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라. 제2차 행사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에 대한 독일 내 평가<sup>18)</sup>

### (1) 긍정적 평가

- (독일 주 상공회의소) 제2차 행사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독일 주 상공회의소(Länderkammer)는 쿠폰을 통한 해결 방안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인 소비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함
  - 대량의 티켓을 그 즉시 환불함으로써 발생하는 파산의 위기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예외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으로 평가
  - 소비자는 티켓의 정확한 가치만큼을 취득하게 되고, 사업자가 도산을 막아 환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평가
- (독일 문화부 장관) 현재 여당인 기민당(CDU) 소속으로 문화부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였음
  - “이번 특별법은 음악회 및 각종 축제행사 개최자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 인한

18) 이하 Reckation beck-aktuell, Becklink 2016320 내용을 요약한 것임.

중요 문화산업 분야를 구조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고 평가함

- 지난 기간 동안 청중이 동반되는 행사는 개최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행사 주최자의 일부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익감소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해결 방안이 사업자와 고객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함

-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사민당(SPD)의 정치인인 요하네스 페히너(Johannes Fechner)는 행사개최자와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

## (2) 부정적 평가

- (독일 자유민주당) 독일 자민당(FDP)의 의원인 카타리나 빌콤(Katharina Willkomm)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취함
  - 사업자의 쿠폰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실상 신용대여자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독일 좌파당) 독일 좌파당(Linke)의 원내교섭대표인 아미라 모하메드 알리(Amira Mohamed Ali)는 소비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는 민법의 핵심 기본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함



## 4. 결론 및 시사점

### 가. 신속한 한시적 법률의 제정

- 독일의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 제정은 제1차 및 제2차 모두 매우 신속하게 입법되었다는 점에 큰 특색이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 기인하는 법이므로 영구히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한시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임시적 차원의 법률로서 제정하였음
- 국내의 경우 통상 신속한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COVID-19 팬데믹 소비자 피해에 대한 특별 분쟁해결기준” 공포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분쟁해결기준은 임시적 성격을 가질 것이므로 그 효력 기간을 한정하여 **한시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나.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업자 파산위기 보호의 균형

- 독일의 소비자계약 분야 코로나 특별법 내용은 소비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대규모 계약 취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제1차 코로나 특별법에서는 지불유예제도와 해지배제 특별규정을 도입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득감소**를 모두 **고려**하였고, 제2차 코로나 특별법에서는 **쿠폰 발급**이라는 예외를 허용하여 양 당사자들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였음
- 국내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사업자간 상생의 관점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업자 파산위기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파산** 시 궁극적으로 **더 큰 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미 체결된 소비자계약을 유지하면서 쿠폰 발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김진우(2020),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5.27.),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공정위, 적극 행정 사례 소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3.15.),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9/18110, 19. Wahlperiode 24.03.2020,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der CDU/CSU und SPD Entwurf eines Gesetzes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Reckation beck-aktuell, Veranstalter können bei Absage wegen Corona auch Gutscheine herausgeben, Becklink 2016320.

Schmidt-Kessel/Möllnitz, Coronavertragsrecht - Sonderregeln für Verbraucher und Kleinstunternehmen, NJW 2020, 1103 ff

Wolf/Eckert/Denz/Gerking/Holze/Künnen/Kurth, Die zivilrechtlichen Auswirkung des Covid-19-Gesetzes - ein erster Überblick, JA 2020 401 ff.

독일 연방법무부 홈페이지 내 「민법, 파산법, 형사소송법 상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력 완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2020.3.27.))」 :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FH\\_AbmilderungFolgenCovid-19.html](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E/FH_AbmilderungFolgenCovid-19.html)

독일 연방법무부 홈페이지 내 「행사계약법 상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력 완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Veranstaltungsvertragsrecht(2020.5.15.))」 :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vid19\\_Veranstaltungsvertragsrecht.html](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BGBl_Covid19_Veranstaltungsvertragsrecht.html)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